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잔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 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516억원(국비 157억원·사비 359억원)을 들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또 인재?... ‘화정 아이파크 참사’ 반복 안돼”

### 광주 치평동 대표도서관 공사 콘크리트 붕괴사고

#### “전쟁 나는 줄”... 동료 작업자·주민들 ‘가슴 철렁’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놀라서 동료들과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들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3년여 전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겪었던 만큼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11일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한창 공사가 이뤄져야 할 이곳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잔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모든 공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공사장 입구에는 수십여 대의 소방 구조 차량 등이 줄지어 사고 현장으로 투입됐고, 구급 차량이 수시로 사고 현장을 오갔다.

높이 15m, 폭 20m, 길이 48m에 이르는 구조물은 포탄을 맞은 듯 내려앉은 상태였다. 지하 2층 높이까지 무너져 내린 구조물은 콘크리트와 철근 등이 뒤엉켜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매몰자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고 직후 매몰자 4명 중 1명이 콘크리트 먼지에 뒤덮인 상태로 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근로자 A씨는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져 내린 현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하 2층에서 외벽 방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인근 광주공원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리가 자주 들렸던 터라 붕괴 소리를 단순 전투기 소음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먼지가 일고 땅이 흔들리는 모습에 놀라 황급히 동료들과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하마터면 나도 사고가 날 뻔했다. 구조물이 무너졌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몰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구조돼야 할 텐데 걱정이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40대 근로자 B씨는 콘크리트 붕괴 굉음에 화들짝 놀라 공사현장으로 뛰어갔다.

3년 전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당시 직장 동료들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B씨는 “너무 놀랐다. 인근 건물 내부 도장 작업 중이었는데 차량 추돌사고가 크게 난 줄 알았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난 소리인 것을 인지하고 놀란 마음에 뛰어갔다”며 “아이파크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도서관 공사현장 옥상층 레미콘 타설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공사에 투입됐던 인원 97명 중 4명이 매몰됐다.

오후 7시 기준, 소방당국이 매몰자 중 옥상층에 작업하고 있던 미장공 A씨(47)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명의 위치는 미확인 상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노동청,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처법’ 조사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 관계자 측 과실이 특정된다면 광주 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주지검장에 김종우 부천지청장 승진 임명

### 박현철 광주지검장 사의 표명

신임 광주지검장에 김종우 부천지청장(사진)이 승진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검자들에게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



명’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자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

로스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앞서 항소 포기 사태에서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구조당국과 공사현장 관계자가 브리핑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직권남용 혐의’ 이정선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기각

### 광주지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광주지검이 청구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

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과 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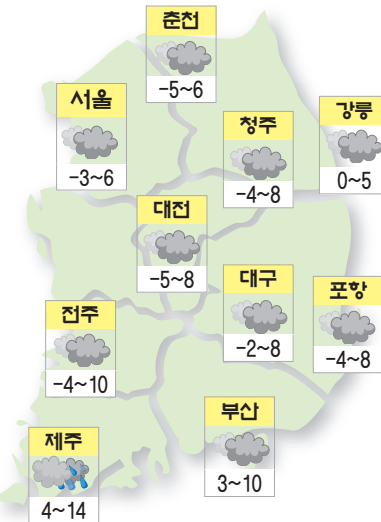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해당 준항고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감사관 채용 당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55)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예보	07:31	달름	00:09
☁️	예보	17:21	달름	12:47



광주	☁️	-1~10
목포	☁️	-2~8
여수	☁️	2~10
순천	☁️	-2~10
구례	☁️	-2~11
광주	☁️	-3~11
임도	☁️	-1~11
흑산도	☁️	4~9
진남	☁️	-3~11
진도	☁️	-1~9

목포	일출(고)	07:34 / 20:10
	일몰(저)	00:37 / 12:44
여수	일출(고)	02:37 / 14:55
	일몰(저)	08:25 / 21:24

### 방파제서 낚시하다 추락

만년필 ○~한 낚시객이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방파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록인 테트라포드(방파용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추락해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

1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9분 전남 완도군 신지면 방죽포 방파제 인근 테트라포드 사이에 낚시객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테트라포드 사이에 갇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A씨를 32분 만에 구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미끄럽고 구조적으로 추락 위험이 크다”며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은 테트라포드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 법무부, 여순사건 상소 취하

법무부는 11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상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